

정권과의 첫 싸움, 투쟁의 포문을 열자



기만적인 일자리 확대정책

5월 30일 노동부와 경총,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을 발표했다. '규제완화', '직무-성과급제 전면 도입', '임금인상 자제', '플타임 정규직 축소 및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에 밀실야합을 한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시간제 정규직'이라는 말로 포장되었지만 그래봤자 단시간근로에 불과하다. 이는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켜서 양만 늘리자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상사·지속적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지 못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월평균 임금은 127만 430원으로 정규직 211만 4,070원의 60%에 불과하며, 비정규직 평균임금인 126만 9,040원과 거의 차이가 없다.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새누리당이 발의한 사내하도급법은 간접고용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해제해서 아무런 사유와 기간 제한도 없이 간접고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사내하도급법이 통과된다면 오랜 투쟁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대법원의 불법 파견 판례가 무효화되고, 제조업 파견이 완전히 허용되어 간접고용이 대대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계속되는 민주노조 탄압

박근혜 정권 노조탄압의 첫 번째 화살은 전교조를 향하고 있다. 올 2월에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원도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있는 전교조의 규약이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논리는 공무원노조의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하는 데에도 적용되었던 논리다. 공무원노조가 이후

해고자를 제외하고 2010~2012년 세 차례나 노조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조 설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떤 빌미와 명분을 내걸더라도 결론은 민주노조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철도노조의 단협을 해지하고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노조를 악랄하게 탄압한 바 있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가리지 않고 단협 해지와 어용노조 설립을 통해서 민주노조 파괴공작을 벌였다.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기초를 이어가고 있고,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과 배제를 기초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민영화, 노동자 민중 죽이기 정책

박근혜 정권 철도, 가스, 전력, 의료, 상수도 등 모든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민영화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철도공사를 '독일식 모델'로 개편하겠다고 하며, 코레일의 자회사를 만드는 방식으로 수서발 KTX 노선과 신규노선들을 분할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는 분할민영화, 즉 찢어서 팔아 먹기다.

가스민영화 법안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천연가스를 가스공사 이외에 민간자본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가정용 가스요금 인상과 SK, GS등 재벌의 이익확대를 낳을 뿐이다.

전력 역시 신규 건설 18기 가운데 민간자본이 12기를 차지해서 2027년이 되면 그 비중이 30%에 달하게 된다. 이러한 발전 민영화는 전력수급의 불안정과 정전사고를 초래하게 되고, 재벌에게는 천문학적 이익을 안겨준다. 2012년 SK E&S, GS POWER,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 발전회사들은 9,40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지자체가 공급하는 상수도도 민간위탁방식 민영화가 지속되고 있다. 정권은 2030년까지 5개의

거대 물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상수도 민영화는 요금인상과 지자체의 부담만 가중시킨다. 논산의 경우 요금이 12.5% 인상되었고 위탁비용은 281%나 증가하였으며, 양주는 20년간 1,200억 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여 위탁을 철회하려고 소송까지 벌였으나 패소했다.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의료민영화를 획책하는 시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서 드러났다. 박근혜 정권은 흥준표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을 방조했고,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의료관광 호텔을 추진하는 등 의료민영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민영화는 요금인상과 재벌 특혜뿐 아니라 구조조정과 노조탄압을 동반한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감축과 노동강도 강화, 민주노조에 대한 공격이 강화될 것이다.

투쟁의 포문을 열자

박근혜 정권이 그 반노동자적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를 중심으로 민중운동이 힘을 모아 6-7월 민영화 저지 투쟁에서 정권의 예봉을 꺾어야 한다. 2002년 철도/가스/발전 노조의 공동파업은 정권의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그 결과 노무현 정권은 네트워크 산업 민영화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고용률 제고와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한 노동유연화 공세, 민주노조에 대한 배제와 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너진 민주노총의 지도력을 복원하고 민주노조 운동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실질적인 저지선을 형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권 초기에 투쟁을 통해서 누가 자신감을 가지느냐가 향후 운동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민영화 저지 투쟁을 시작으로 기세를 올리자.

통상임금 논란 속 정권의 노림수

지난 방미기간동안 박근혜 정권은 노동정책 중 하나를 좀 더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다. 통상임금 소송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댄 애커슨 GM 회장의 요청에 대해 “그 문제는 GM 혼자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답하며, 이참에 재계를 괴롭혀온(?) 통상임금 문제를 통으로 손보겠다고 한 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지간히 다급했던 모양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해외 자본가의 부당이득 갈취에 대해 ‘유감’이라는 외교적 언사는커녕 도리어 안 돌려줘도 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으니 말이다.

통상임금은 시간외 수당의 산정기준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1996년부터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하고 통상임금 범위를 좁게 해석해왔다. 고정성과급은 물론 근속수당, 가족수당, 식대 수당 등을 제외시킨 것이다. 그래야 사업주들이 노동자를 연장근로시키는데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지배세력들에겐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중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은 법리상으로도 어긋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이를 그대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지배세력들도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첫째, 연장근로에 덜 의존해도 되는, 다른 방식의 생산조직방법을 찾아낸다. 즉, 임시·일용직 및 시간제 근무를 확대해서 물량변동에 대응하고,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빈틈없는 노동’으로 기존 노동과정을 재조직하는 것이다.

둘째, 연장근로에 의존하더라도 기본급 비중을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낸다. 지배세력이 보기에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주범은 호봉제 테이블이었고, 그래서 성과급연동제나 직무급제로의 임금체계변화를 도모하면서 연공급제 요소를 약화시킨다.

이러한 노동과정과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동자운동이 이에 맞설 태세를 갖추 때다.

한미동맹 환갑잔치, 무슨 선물이 오겠나?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큰 사고를 치고 왔다.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이 ‘국격’을 떨어뜨렸기 때문은 아니다. 최근 한반도 위기를 계기로 한미동맹을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한 군사적·경제적 전략에 한국이 하위 파트너로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최근 한반도 위기가 비상하게 고조된 상황에서 60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미 양 정상은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택했다.

대북정책 공조를 뒷받침하는 군사동맹 강화 방안도 폭넓게 논의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 공약을 재확인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 체계 편입을 암시했다. 미국은 대북 ‘확장 억지’라는 선물을 한국에게, 한국은 대중 견제 동맹이라는 선물을 미국에게 준 것이다. 미국산 첨단무기 구입은 덤이다.

또 양국 정상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년을 자축했다. 미국은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협정(FTAAP)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미FTA는 그 발판이 되고 있다. 미국이 앞에서 이끌고 일본이 뒤에서 미는 TPP가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견제할 목적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미동맹 환갑잔치에서 미국과 한국이 주고받은 거니한 선물들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과 정치적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지만, 한층 공격적 성격을 더해가는 한미동맹은 중국과의 갈등과 북한의 핵무장을 부를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이 아니라 평화운동이 한반도 평화를 약속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들고 온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한미 합동군사훈련 저지, 미국산 첨단무기 도입 반대, 주한미군 방위비 추가 분담 저지, 미국의 MD 편입 반대를 외치자. 노동자들이 평화운동에 나서야 한다.

노동자를 위한 핸드북 페미니즘

이유미 지음 | 사회진보연대 발간
174쪽 | 신국판

노동자를 위한 핸드북 <페미니즘>은 여성노동자가 일터와 가정에서 겪는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합니다. 노동자운동이 더 많은 여성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싸움에 나서는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함께 읽고 토론합시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구입문의: 사회진보연대 tel. 02-778-4001,2 | fax. 02-778-4006 | email. pssp@jinbo.net | H/P. www.pssp.org

